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미은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다. 옆에 자리한 일행도 마찬가지 인듯했다. 각색에 앉은 관객들이 웃을 때마다 ‘음, 이런 아닌데’ 하며 속으로 불편한 심기를 얹늘렸다. 하지만 2시간 후, 커튼을 때 우리는 기립박수를 쳤다. 공연 후에도 한없이 눈물을 쏟아내는 지인 때문에 각색에 한참을 앉아있어야 했다. “사립을 완전 무장해제 시켜 버리네!” 지인이 내뱉은 말이었다. 5월조 서울 드라마센터에서 연극 ‘푸르른 날’에 관람했을 때의 모습이다.

우스꽝스러웠던 ‘오월 연극’

처음에 안절부절이었던 건 이 작품이 ‘5월 광주’를 다투고 있어서였다. 5월 소재 작품에서 광주사람은 객관적이기 어렵다. 광주에서 볼 때도 그려한데 하물며 서울에서, 그것도 ‘5월 광주’를 모를 것 같은 20대 젊은 관객들 사이에서 극을 보자니 좌불안석이었다. 관객들의 반응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다.

목포 출신 정경진씨의 희곡인 ‘푸르른

날’은 ‘차범석 희곡상’ 수상작으로 지난 해 대한민국연극대상 작품상 등 많은 상을 훨씬 받았다. 연출가의 말을 읽어보니 ‘명랑하게 과장된 통속극’, ‘21세기 신개념 신파국’인 작품에 대해 초연 당시 ‘장난이

슬직히 지난해 문화재단이 수여 원을 들여 제작한 ‘자스민 광주’의 경직성과 뻔

왜 또 ‘님을 위한 행진곡’ 일까

지나치다,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관점들도 있었던 듯하다.

물론 초반에는 지나친 감도 있었다. 하지만 그 ‘장난’이 결코 장난에 머물지 않았다. 처음에 웃기며 비쁘던 관객들은 점점 작품에 몰입했다. 배우들이 김남주의 시 ‘학살’을 낭송할 때, 각색에서는 어떤 흥분이 감지됐고, 중반을 넘어서면서는 흥느낌이 가득했다.

개인적으로 5월을 이야기하는 광주산(產) 작품들의 회의성에 차지되었던 터라 ‘5월을 이렇게 풀어내는구나’하는 신선힘을 느꼈다.

연극을 보고 난 며칠 후, 광주문화재단

과 광주시립극단이 공동제작하는 브랜드 공연 ‘오디션’ 공고를 보고 다시 답답해졌다. 2억 원이 투입되는 작품의 제목은 ‘님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아, 왜 전히 광주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여야 하는 걸까?’였다. 물론 제목만 보고 작품 내용을 기능하는 게 선별로 판단이라는 건 안다. 하지만 ‘제목’은 모든 것을 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슬직히 지난해 문화재단이 수여 원을 들여 제작한 ‘자스민 광주’의 경직성과 뻔

이런 식의 ‘가벼운’ 해석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필자가 ‘푸르른 날’에의 초반 가벼움이 못내 불편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극단 토박이와 신명의 5월극은 소중한 자산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무대에 올려지는 게 맞다. 반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5월 작품은 완전한 새로운 유통으로 무장해야 한다.

발칙한 도발과 상상 필요해

물론, ‘푸르른 날’에가 오월 작품의 ‘완성형’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 예술인들도 그같은 발칙한 도발과 허를 찌르는 상상에 과감히 뛰어드는 게 필요하다.

6월, 관객들을 만날 ‘님을 위한 행진곡’이 그런 새로운 창조의 기운 안에서 만들 어지길 기대한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우려가 기우에 그치기를 간절히 바란다.

회사가 80년 5·18 현장이었던 금남로에 있다보니 해마다 가까이서 5월을 경험한다. 올해는 조금 다른 기운을 느꼈다.

금남로에는 정치적 구호 대신 1988년 중학교 3학년이었던 소년이 쓴 시 ‘복련이 진들’이 내걸렸다. 길을 걷다가, 14층 사무실 유리창으로 내려다보며 하루에도 몇 차례 시를 읽는다. 지금은 이 소년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지기도 했다. 그렇게 5월은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

참고로, ‘푸르른 날’은 20일까지 공연된다. <문화부장> mekim@kwangju.co.kr

시설

진보당 ‘몰염치’에 지역민 배신감 크다

통합진보당 부정·폭력 사태와 당권파, 비당권파 간의 막가파식 갈등을 바라보는 광주·전남 지역민의 눈길이 싸늘하다. 연말 정권 교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우려와 함께 ‘몰염치’ 진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진보당이 혁신적인 수습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으로 고사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진보당은 14일 강기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경쟁부문 비례대표 14명의 사퇴를 의결했다. 하지만 당권파는 “법적 효력이 없는 원천무효”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 4·11총선에서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지역민들로선 이런 진흙탕 싸움에 배신감마저 느낀다. 당시 광주·전남의 진보당 지지율은 각각 18.6%, 14.7%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각각 1위, 3위를 보았을 것이다.

공무원이 혈세 펴주고 해외여행까지

전남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공사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과 행정권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르다 감사원에 무더기 적발됐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은 공사비를 부풀려 혈세를 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뜯어내는가 하면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

니 이런 과정이 또 어디에 있는가. 일선 지자체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노골적이고 지능화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다. 해당 기관에선 비리가 터질 때마다 이러저러한 대책을 내놓지만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다. 공직 사회의 의식 변화와 가혹한 처벌 등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공직자는 무엇보다 엄격한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 뇌물이 독약이라는 인식부터 심어야 한다. 사업 및 공사 발주, 감독 과정의 투명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비리 공무원에 대해선 ‘지위 고하와 액수 과다’에 관계없이 무조건 파면하고, 시민과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강도 높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솔방망이 처벌로는 오히려 내성 만 키울 뿐이다.

無等鼓

